社 說

진취·창조적인 인재를 원한다

— 다시 맞이하는 입시철에 부쳐

가을과 겨울이 어김없이 오듯이 이번에도 입시철이 다가왔다. 수험생들의 긴장과 기대섞인 불안은 점증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의 초조함은 실로 고통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입시를 가운 잔뜩에 비유한다.

우리 경희는 새로운 이재를 맞이하는 설레임 또한 숨기고 싶지 않다. 이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적 지도자로 길러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수 많은 인재들이 국풍81처럼 몰려오 선의의 경쟁과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여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우리 경희는 장학 초부터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를 하여 대학과 대학인이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고, 진보에 있어 시간 압축의 혜명을 이루며 일취월장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희는 인류문화 미래의 오늘과 내일을 일찍이 간파하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장처를 조화시키는 종합문명의 창조와 구현에 온 심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취지로 잘살기 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등을 통해 조국의 발전과 세계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문발전과 경희학파조성에 앞장섰고 또한 경희 학문의 결실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속으로 퍼져나가는 사회적 기여를 끊임없이 추구해왔음을 거듭 밝힌다. 대학과 사회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상호보완, 변증법적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어느 대학보다도 앞서 왔다고 본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입시교육이 갖는 문제점과 여러 분이 안고 있는 고독한 경쟁에 마음으로 동참한다. 그러면서 경희는 언제나 불편의 요지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노력하는 자들의 편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시련에 주춤거리며, 점수 몇점에 의기소침하는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불굴의 용기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론들을 맞이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경희는 소아가 아닌 대아를 지향하며, 인류이해에 통찰하고 이를 짊어지고 나갈 전인적 지도자가 될 사람을 환영한다. 경희와 뜻을 같이하는 인재는 단순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현실적 여건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신껏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지원자 이어야 한다.

우리도 대학을 지원할 때 진정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겠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지원자를 원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의연히 자기를 지키고, 후기 자본주의의 각각의 인간군이 아닌, 주체한 삶의 길을 자켜나갈 진취적인 기상의 인간, 창조적인 노력의 인간을 원한다.

누군가 인생은 불행보단 조건을 충분한 조건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자금의 시련을 끝내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 경희캠퍼스에서 만날것을 우리는 거듭 기원한다.

농민의 땀 반영된 수매값 절실

— 올해 쌀 수매값 논란을 보며

양곡 관리법 법률이 지난 88년 국회를 통해 개정 발의됨에 따라 정부는 그 후 매년 이맘때면 추곡 수매값 및 그 수매량 결정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다. 물론 예년과 같이 정부와 각당은 의견 합일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기획원은 최근 3당이 마련한 수매가 7.9% 인상에 9백80만~1천50만섬 수매안을 갖고 그 결정에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마찬의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단지 지난해의 추곡 수매값 인상을 기준으로 아니면 임금인상률과 물가 변동률에 따른 적용은 어쩌면 농민을 우롱하는 권력층의 숫자놀음이 불과한 결치려 단계이기 때문이다.

추곡 수매값 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분명 두말 할 나위 없이 '땀의 주인'인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정당한 댓가 즉 땀흘린 노동의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집행으로서 농민의 생활수준 및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기초적 의식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매값은 최소한 농민들의 생계비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추곡 수매값이 '평균이하의 토지'에서의 생산비를 감안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즉 우리의 농업이 어떠한 토지를 경작하는가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가 책정되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정부는 일반물가의 상승률에 따라 쌀의 수매값을 결정해 왔다. 그러한 결정은 수매값의 현실적 가격 하락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주었지만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농민들은 매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신의 분신을 헐가격에 떠 넘기게 되었고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쌀에 대한 수요를 얼마로 산정하는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쌀값 책정시 생산비를 추계할 때 쌀을 생산하는 농경지의 일이 얼마만큼의 산정은 수요와 충족의 적정치에서 최적의 가격이 이루어 지듯 현재 생산되는 농경지의 정확한 산출만이 농민에게 최고의 생산비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농가의 자가노동력의 비중이 큰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농민의 생활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인구변 분포로 볼때 과잉인구와 불완전 취업상태의 연속성상에서 열악한 구조의 농업환경은 최악의 입금구조로 결정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민의 빈곤은 해소되기 어려운 실을 겪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할 때 추곡 수매값 결정의 공정을 그리고 농민의 의사를 존중 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할수 있는 농민대표들 추곡 수매값 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겠으며 이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도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야 겠다. 경료적으로 추곡수매값이 많이 인상된다고 해서 우리의 농업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낙후된 농업환경과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국내농업의 위축, 그리고 뿌리 깊이내려오고 있는 소자재도에서의 소작농의 문제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단지 몇퍼센트의 추곡수매값 인상은 '솜이지 않고 외양간 고치는'격의 뒷북치기식의 농정만이 되풀이 될것이다.

명제비평

'반북' 과대포장한 간첩사과 보도

선거때마다 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동권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많은 진보 인사들을 구속, 또다시 진보세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이하 진정추)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인사 1백46명은 지난 4일 "북한 당국과 조선 노동당은 한국 민중 운동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는 다음날인 5일자 각 일간지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었다. 기존 진보세력의 움직임에 둔감했던 언론의 태도를 상기한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 일간지를 살펴보면, '재야 대북 공개 사과 촉구(경향신문)', '재야서 북한 사과 촉구(서울신문)' 등과 같이 '재야'에서도 북한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있다'라는 식의 자막을 뽑고 있다.

그 내용 또한 "북한 당국과 조선 노동당은 한국의 민중운동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고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북한 당국이 일부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정서를 자극해 한국 사회에 분한 지지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명백한 시행착오"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국 민중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국내의 평화정착 공작을 중지하고 남북 대화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정책만으로는 경제의 활성화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클린턴은 대외통상정책부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부내에 경제안보팀의 최고SC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문제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자세로 대외경제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제핵무기'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국내법인 '슈퍼 301조'(지난 88년 포괄통상법의 한시 입법으로 성립된 것임)를 부활시켜 적용시킬 것을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환경 규제도 현재보다 더 엄격히 시행할 태세여서 철강이나 자동차 등 공해를 배출하는 산업의 상품의 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 지적소유권협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외 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사뭇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카터 민주당 정부(민주당정권)와의 악연을 가진 경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 정권보다 더 보호주의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하겠다. 또한 미국국민이 클린턴을 선택한 이유가 미국의 경기침체이고 이에 따라 그의 우선과제의 하나가 경기회복에 있고 그 수단의 하나로 통상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나타난 클린턴 후보의 경제정책에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우리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도 보다 엄격한 규제를 계획이어서 철강과 자동차 등 공해와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의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삭감이 미국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요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국방예산에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UR협상의 자세와 관련 클린턴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적용 할지도 모른다. 그런경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우리는 쌀시장의 일부를 내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적 규제지역에 있어서 약화된 감이 있지만, 세계 최대의 GNP를 보이는 국가이고 또한 교역량도 세계 최대인 대국이다.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미국과의 무역량이 우리나라의 총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가장 크고,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액도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클린턴 정부의 강경한 대외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개방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것은 분야별로 완급이 다르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다. 이미 개방화된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괄목할 만한 품질의 혁신을 보이고 있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예를 생각한다면 개방화에 대해서 막연히 피해의식에 젖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적소유권보호 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지적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따라잡기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상품은 외국으로부터 규제를 당하기 이전에 우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외국과의 joint-venture를 구성하는데 있어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은 공동보조를 맞추고 산학협동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대미 통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화에 필요한 제도와 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하겠다.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벌의 존립에 대해서 제고해볼 시기이며, 국가경제의 형평이라 할 금융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겠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이 가해져야 하겠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쟁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하겠고 각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수정 記者〉

'시한폭탄' —美의 통상압력

— 미국의 새 경제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책

사론

박 종 국
〈본교감사·경제학〉

미국 국민은 지난 11월 4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빌 클린턴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미국의 집권정당이 12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전후세대의 본격적인 등장, 탈냉전시대에서의 미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선거공약을 통해서 밝힌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최우선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클린턴은 국방비를 삭감하여 도로, 통신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및 세금 신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감사 실시 및 세금부과 등을 천명하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우도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보조비나 수출촉진을 위해서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현재의 높은 실업율을 낮추고 국내 고용 증대를 위해서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투자의 확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는 공화당 정부가 12년간 취한 레이거노믹스와는 정반대의 경제정책이다.

이와같은 국내정책만으로는 경제의 활성화가 성공할 수 없으므로 클린턴은 대외통상정책부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부내에 경제안보팀의 최고SC를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문제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자세로 대외경제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경제핵무기'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국내법인 '슈퍼 301조'(지난 88년 포괄통상법의 한시 입법으로 성립된 것임)를 부활시켜 적용시킬 것을 누차 경고해왔다. 또한 환경 규제도 현재보다 더 엄격히 시행할 태세여서 철강이나 자동차 등 공해를 배출하는 산업의 상품의 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 지적소유권협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외 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UR·환경규제등 강경조치 우려

변화 조응한 경제구조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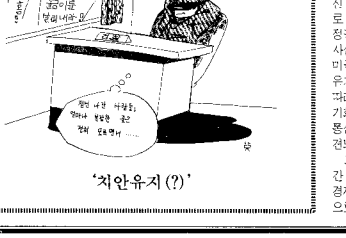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사뭇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카터 민주당 정부(민주당정권)와의 악연을 가진 경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 정권보다 더 보호주의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인된다 하겠다. 또한 미국국민이 클린턴을 선택한 이유가 미국의 경기침체이고 이에 따라 그의 우선과제의 하나가 경기회복에 있고 그 수단의 하나로 통상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나타난 클린턴 후보의 경제정책에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약간의 적자를 보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클린턴 당선자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관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정책기조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미국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통상자세 강경화 조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은 명확하다고 보여진다.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경우 반도체, 철강, 섬유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주력상품이 덤핑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높아진다.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자국 도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고 세무사찰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우리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도 보다 엄격한 규제를 계획이어서 철강과 자동차 등 공해와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의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삭감이 미국내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 방위비 분담을 늘리려는 요구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국방예산에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UR협상의 자세와 관련 클린턴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적용 할지도 모른다. 그런경우 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우리는 쌀시장의 일부를 내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적 규제지역에 있어서 약화된 감이 있지만, 세계 최대의 GNP를 보이는 국가이고 또한 교역량도 세계 최대인 대국이다.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미국과의 무역량이 우리나라의 총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가장 크고,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액도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클린턴 정부의 강경한 대외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선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개방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것은 분야별로 완급이 다르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겠다. 이미 개방화된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괄목할 만한 품질의 혁신을 보이고 있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예를 생각한다면 개방화에 대해서 막연히 피해의식에 젖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적소유권보호 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성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지적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따라잡기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산하는 상품은 외국으로부터 규제를 당하기 이전에 우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외국과의 joint-venture를 구성하는데 있어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은 공동보조를 맞추고 산학협동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대미 통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화에 필요한 제도와 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하겠다.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벌의 존립에 대해서 제고해볼 시기이며, 국가경제의 형평이라 할 금융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겠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이 가해져야 하겠다. 그리하여 내부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쟁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하겠고 각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CO 메세지⑥ 2학기 종강편

道雖邇不行不至

도수이불행부지
갈 길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목표에 거의 도달했어도
노력하여 이르지 않는한 목표를 이룰 수 없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강을 맞이하고 학년말이라 자칫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대충대충 보내기 쉬운 때입니다.
또한 이때에 이제까지 노력해온 자신의 목표달성도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계획했던 올해의 목표,
전에 아무리 고전분투했어도 끝까지 노력하여
마무리 짓지 않는한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목표에 가깝고 또 92년도가 얼마남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세운 올해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갑시다.
충실한 마무리가 힘찬 도약을 낳습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